

對日적자 '눈덩이'... 7개월만에 201억弗

對日수출, 수입의 절반도 안돼 7월 무역적자 19억3천만 달러

일본과 교역에서 만성화된 적자가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만 무역적자 누계액이 벌써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대(對)일본 수출이 수입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15일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기록한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무역적자는 201억3천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로 가면 지난해 29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대일 적자는 올해 30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대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과 달리, 미국시장에서 내는 흑자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1~7월 52억5천200만 달러였던 대미 무역흑자는 올해 같은 기간 38억8천100만 달러로, 13억7천200만 달러나 줄어 들었다. 11년만에 무역적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를 비롯한 광물, 곡물 등의 원자재가 급등이 무역적자의 주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일 적자 확대와 대미 흑자 축소도 무역적자에 상당한 몫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일본 여행 확대 등에 영향받아 일본과의 서비스 수지 적자도 지난해 28억2천만 달러로 1년새 53.1%나 늘어난 상황이며 상품과 서비스 양 측면에서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편 7월 무역적자가 잠정치보다 3억1천만 달러 늘어난 19억3천6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날 7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6.0% 증가한 410억9천300만 달러, 수입이 47.2% 늘어난 430억2천900만 달러로, 19억3천600만 달러의 적자를 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7월의 무역적자는 1월(39억1천600만 달러) 이후 올해 들어 달 뒤로는 가장 큰 것이며, 7월까지 무역적자 누계도 83억4천900만 달러로 불어났다.

카드 가맹점 현금 고객에 금융위, 할인 허용 검토

신용카드 가맹점이 현금을 내는 고객에게 카드 이용 때보다 제품을 더 싸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법상 카드 가맹점은 현금 지급 고객과 카드 이용 고객을 차별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할 경우 가맹점은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부담이 없다"며 "따라서 현금 지급 고객에게는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파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복절 '민주의 종' 타종식 제63주년 광복절인 15일 광주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민주의 종각에서 박명준 광주시장과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등이 '민주의 종' 타종식을 갖고 있다. 민주의 종은 아시아문화전당 지하 주차장 조성 공사로 이날 타종식 이후 해체돼 오는 2010년경 현 위치에 복원 건립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휘발유값 석달만에 1,700원대로 내려

경유도 최저치... 지난달 17일 이후 연속 하락세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이 3개월 만에 1천700원대로 내려왔다. 15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9천700여 곳의 휘발유 평균값은 전날보다 18.76원 떨어진 1천766.87원(1천766.87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난달 17일 이후 29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휘발유는 지난달 17일(1천948.04원)에 비해 18.76원 떨어졌고 경유는 지난달 17일(1천943.80원)보다 173.20원 내렸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6주 연속 하락해 배럴당 110달러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어 당분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日 종전 63주년 기념일 총리 야스쿠니 참배 안해

일본은 15일 2차대전 종전 63주년 기념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당시의 일본인 전사자에 대한 명복을 비는 추도행사를 가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일본부도관에서 전국전몰자추도식을 개최했다. 추도식에는 일일 내외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그리고 전국 각지의 희생자 유족 4천700명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평화를 기원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후쿠다 총리는 이날 A급전범 합사로 참배 논란이 예상되는 야스쿠니 신사 대신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참배하고 헌화했다. 그러나 총리 재임 중이던 2006년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일관계를 극도로 경색시켰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3년 연속 종전기념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그는 참배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野 3당 광복절 행사 불참... 백범 묘역 참배

건국 60년 경축식 반발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야당 3당 대표들은 15일 정부 공식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고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서울 효창공원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야 3당이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치른 것은 사회 일각의 '건국절' 추진 움직임을 반대해 온 가운데 이날 정부 행사가 '건국 60년 경축식'을 겸해 열린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 60여명은 이날 오전 김구 선생 묘역에서 묵념·분향한 뒤 만세삼창하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민주당 정 대표는 "8·15는 광복절인데 이를 '건국절'로 덧씌워 역사를 왜곡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다"며 "광복절 행사를 반대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률을 계승한다고 돼 있

빛日만평 - 김중두



더도 말고 요즘만 같아라

“정연주 배임, 참 해괴한 논리”

노무현 전 대통령 감사원 비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재직중 배임 행위 논란과 관련, "참 해괴한 논리"라고 반박하면서 감사원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영배 전 국정홍보처 차장은 15일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사담사는 세상'의 봉하일기에 올린 글에서 지난 9~10일 봉하마을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노 전 대통령의 강연내용을 소개했다. 이 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사장이 배임을 했다고 가정하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국민이고, KBS와 정부간 소송에서 합의를 해 KBS가 손해를 봤다면 덕을 본 것은 정부"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정부가 덕을 보고 국민이 덕을 봤는데 정부에서 그걸 문제삼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국민들이 눈 감고 있으면 역사는 계속 뒤로 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제난에 대해 "국가경제 시스템이 붕괴된 1998년에도 국민들이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했고 2003년에도 신용불량자 문제로 상당히 어려웠지만 잘 넘겼다"며 "이번 어려움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의 심각성이 달해 극복할 수 있는 난관"이라고 진단한 뒤 "다만 정부가 빠른 성장을 보여주려고 무리하게 '각성제'나 '홍분제'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영화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거짓말이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정부가 덕을 보고 국민이 덕을 봤는데 정부에서 그걸 문제삼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국민들이 눈 감고 있으면 역사는 계속 뒤로 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제난에 대해 "국가경제 시스템이 붕괴된 1998년에도 국민들이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했고 2003년에도 신용불량자 문제로 상당히 어려웠지만 잘 넘겼다"며 "이번 어려움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의 심각성이 달해 극복할 수 있는 난관"이라고 진단한 뒤 "다만 정부가 빠른 성장을 보여주려고 무리하게 '각성제'나 '홍분제'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영화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거짓말이다"고 비판했다.

시설

기아차 파업 장기화 지역경제 걱정이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14일 주야 6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지난 달 2일 첫 파업 이후 뾰족한 해결책 없이 노조의 파업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기아차 노사가 언제 협상안을 이끌어낼 것인지 안타깝다.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금속노조의 산별 중앙교섭이 한 달을 넘긴데다 핵심쟁점인 '주간 연속 2교대제'에 대한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교대제'에 합의하더라도 임금 및 단체협상이 또 남아 있다. '산 넘어 산'의 상황이다. 전면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이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기아차의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지난 달 2일 이후 5차례 56시간의 파업으로 3천600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어 490여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기아차

전체적으로는 생산 차질 1만여대, 매출 손실 1천300여억원을 기록했다. 기아차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지역경제 전반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광주경제의 23%, 고용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경제는 심각하다. 실업률이 3개월 연속 전국 최고치를 보였고 지역경기의 하강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광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파업의 장기화는 지역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은 18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파업의 명분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해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고물가에도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기아차는 파업의 길진 고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노사가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

한나라 '호남 적극 지원' 반드시 실천해야

한나라당이 옛것 광주시 및 전남도와 가진 정책협의회의 성과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광주·전남의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을 약속한 것은 고무적이다. 광주의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전남의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정 등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지원을 약속한 만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한나라당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정치적 배경을 모르지는 않는다. 박희태 대표 스스로 "짜사랑에 그칠지 모르지만 호남 구애행진을 계속할 것"이라며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중용하겠다"고 말했다. 호남 민심을 얻으려는 속셈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협의회를 평가

할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은 의석 180석이 넘는 거대 집권여당이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한나라당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지도도를 높이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안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면 상생의 길이 아닐 수 없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문화중심도시 조성과 F1 지원법 제정 등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도 상당수 현안사업에 대해 확답을 피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아 눈총을 받았다. 남은 것은 실천이다. 호남에 대한 적극 지원 약속이 '립 서비스'에 그치게 되면 진정성을 의심 받게 되고 호남민심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말이 아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기본·안전·신뢰·법치 키워드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육성

李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8.15경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광복 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63주년 기념일을 터닝포인트 삼아 63개는 새로운 60년의 도약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고, 작가는 '쇠고기파동'으로 촉발된 정권 초기의 국정난맥상을 수습하고 이명박 정부의 재도약을 위한 힘찬 행진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른바 '국정 뉴스타트'다. 이 대통령은 과거 60년의 역사를 성공의 역사,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사 재조명과 후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광화문 네거리에 '현대사 박물관'을 짓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선진일류국가의 조건으로 이 대통령은 기본, 안전, 신뢰, 법치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법치와 국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현안으로 걸려 있는 대북관계나

독도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른 대일관계에 있어서도 조율하면서 조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언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에너지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인 국가 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민생경제에도 상당한 비중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나친 원칙주의와 공격적 국정운영이 야당의 반발을 초래하면서 또 다른 국정난맥상을 연출할 수도 우려도 제기된다. 남북관계와 대일관계도 변수다. 취임 초기의 남북 간 경제협력분야에 어쩔 수 없다해도 그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일관계 역시 독도와 역사왜곡 문제가 재연되면서 언제든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F A X 02-773-933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02-773-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